
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청년정책 추진계획

2024. 3.

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I. 추진 배경	1
II. 추진 여건	2
III. 청년정책 추진계획	3
IV. 중점 과제	4
1. 빈틈없는 취업지원	4
2. 체계적인 자산형성	7
3. 청년생활 걱정해소	10
4. 청년정책 기반확대	14
V. 기대 효과	16
[붙임] 과제별 추진일정	17

I. 추진 배경

◆ 윤석열 정부, 정부 최초로 청년 국정과제 수립·청년 삶 개선 추진

- 청년정책 추진계획('22.10),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('23.3) 등에 따라 일자리·주거·교육 등 분야별 청년정책 추진

「윤석열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」	일자리	단기 실업대책 중심 → 진로탐색, 일경험 지원 *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지원하고 청년 수요가 높은 일 경험 지원 활성화
	주거	공공임대 중심 → 내 집 마련까지 주거정책을 확대 * 서민·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강화하고, 신혼·출산가구 주택공급·금융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강화
	교육	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인재양성 체계 전환 * 핵심 첨단분야별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하고,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노력 지속 추진
	복지·자산형성	자산형성 프로그램 확대 + 취약청년 발굴·지원 강화 * 청년도약계좌 등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고, 자립준비가족돌봄 등 취약청년 지원체계 마련
	참여·권리	정부 정책 결정 과정에 청년참여 제도화 * 장관급 24개 기관으로 청년보좌역·2030 자문단 확대하고, 「청년기본법」 개정으로 청년 참여 및 정책 추진기반 구축

◆ 청년의 삶 여건은 여전히 불안정, 정책 개선 지속 필요

- 청년들은 취업 애로, 세대간 경제적 격차 등으로 어려움 지속
*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: 청년층(15~29세)이 22.6으로 쏠세대 중 1위('23년, 한경협)
- 청년정책에 대한 체감도·만족도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으로, 청년들은 실질적인 정책 참여기회와 권한 확대 지속 요구

◆ 미래 세대인 청년의 성장은 곧 국가 경쟁력 강화

- 청년은 미래를 이끌어갈 주체로서, 청년의 성장과 도약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사회 전반의 활력 제고를 위한 핵심 요소
* 청년실업률 1%p 상승시 잠재성장률 0.21%p 감소('21년, 한경협)
- 청년의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, 청년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,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의 선제적·지속적인 지원 필요

⇒ 청년들의 수요가 높은 분야*를 중심으로, 미래세대인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정책 집중 추진 필요

* 청년들이 바라는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는 ①**일자리**(97.4%) ②**좋은 사람들과의 관계**(95.7%) ③**소득과 자산**(93.7%) (청년삶 실태조사, '23.3월)

II. 추진 여건

◆ [일자리] 기업의 경력·수시 채용 + 청년의 공정·워라벨 가치 중시

- 기업은 경력·수시 채용을 선호하는 가운데, 체계적인 진로탐색·실무 경험 기회 부족*으로 청년의 첫 취업이 지속적으로 느려지는 추세**

* 취업 준비 애로 사유 : 경력직 선호(26.3%), 실무경험 기회 부족(17.2%) ('23년, 한경협)

** 졸업후 첫 취업 소요 기간 : ('20년) 10.0개월 → ('23년) 10.4개월

- 청년들은 '공정', '워라벨' 등의 가치를 중시하나 기업문화의 변화는 아직 부족하고, 이직 및 '쉬었음' 청년도 증가 추세

* 청년 근로자 중 66.8%가 첫 직장 퇴직 경험, 평균 근속기간은 1년 6.6개월
보수·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(45.9%)이 주된 퇴직 사유('23년, 통계청)

◆ [자산] 세대 간 자산 격차 확대, 청년의 자산형성 욕구는 증가

-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세대 간 경제적 격차*는 지속 확대

* 중장년(40세이상)-청년(39세이하) 자산격차: '19년 1.6억원 → '22년 2.3억원('23년, KDI)

- 자산형성 기회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생활고 차원의 부채 증가*

** 29세 이하 자산 대비 부채 비율:('15년) 16.8% → ('23년) 32.1%(전연령대 중 1위)

◆ [생활] 고물가 추세로 인한 생활비 부담 + 청년 마음건강 악화

- 고물가·고금리 추세로 청년들의 학비, 교통비 등 필수 생활비 부담 증가

- 청년 우울증*, 번아웃 증가 등으로 청년 사회활동에 장애물로 작용

* 우울증 환자 중 20대가 19만4200명으로 전 연령중 1위('22년)

◆ [청년정책] 실질적 청년세대 인식·요구 반영 부족

- 연령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맞벌이, 군인, 육아 청년 등 실질적으로 청년정책 수혜를 받기 어렵거나 기존 정책에서 소외되는 경우 존재

Ⅲ. 청년정책 추진계획

“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”

추진 방향

- ❖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성장사다리 마련
- ❖ 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정책 추진
- ❖ 청년의 참여와 기회 확대

중점 과제

① 빈틈없는 취업지원

진로탐색부터 취업, 재직까지 확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

- ① 취업 준비 선제 지원: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, 일경험 기회 확대
- ②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: 서비스산업 해외취업 등 청년선호 일자리 창출 지원
- ③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: 공정 채용 기반 마련, 일·생활 균형 지원

② 체계적인 자산형성

튼튼한 자산형성을 발판으로 더 높은 도약을 지원하겠습니다

- ①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: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개선
- ②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: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, 경제·금융 교육 확대
- ③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: 청년도약계좌와 주택청약·창업 지원 정책 연계

③ 청년생활 걱정해소

청년의 주거, 생활 걱정과 부담이 줄어듭니다

- ① 주거 부담 완화: 청년 공공분양 임대 공급, 기숙사비 결제 다양화
- ② 생활비 부담 완화: 장학금 확대, 교통비·문화비·여가비 지원
- ③ 청년 건강·안전 지원: 마음건강 첫 진료비 지원, 청년 해외 안전 강화
- ④ 청년 결혼·출산 부담 경감: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, 결혼 메리트 확대

④ 청년정책 기반확대

청년층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와 기회를 지원합니다

- ①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: 위원회, 청년보좌역 등 참여 확대·내실화
- ②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: 중앙·거점 청년지원센터, 온라인 통합 플랫폼

IV. 중점 과제

1 빈틈없는 취업지원

◆ 「①진로·역량개발 → ②취업 → ③재직」 취업 단계별로 빈틈없이 지원, 청년들의 일자리 기회 확대

⇒ 쉬었음 청년을 최소화하고, 청년고용률·실업률 지속 개선

1 [진로·역량] 취업 준비 선제 지원

1. 대학 재학생부터 취업 준비 지원 고용부·교육부·병무청 협업

□ 선제적 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전국 50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 15만명 재학생 등에게 고용 지원 서비스 제공* **고용부**

*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: ('23년) 12교, 3만명 → ('24년) 50교, 15만명

○ (**맞춤형 지원**) 심층상담을 통해 저학년에는 직업·진로탐색 지원, 고학년에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, 훈련과 일경험 제공

○ (**재학생 일경험 확대**) 일경험이 단순 체험 아닌, 실질적으로 적성 탐색·역량 제고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*

고용부·교육부·외교부 등

* ▲ 재학생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시 대학 학점인정 확대 추진 및 방학중 일경험 운영
▲ 해외 ODA 현장 경험 단기 프로그램 확대 및 해외봉사활동의 학점인정 확대 추진

□ **군 장병** 청년도 군 복무가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, 직업 선호도 검사 및 병역진로상담 등 **병역진로설계 지원 확대*** **병무청**

* ▲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확대 : '23년 8개 → '24년 11개
▲ 지원대상 확대 : (현행) 현역병 입영대상·고등학생 → (개선) 사회복무요원까지 확대

2. 직무역량 향상 기회 확대 고용부·국조실·기재부 등 협업

- ☐ **(일경험 규모 확대)**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, 민간·공공의 다양한 일경험 기회 대폭 확대('23년 8.5만개 → '24년 10만개 이상)* 고용부·국조실·기재부 등
 - * ▲ 민간(2.8 → 4.8만명) ▲ 공공기관(2 → 2.2만명) ▲ 중앙부처(2 → 5천명)
 - ▲ 해외(4.5 → 5.7천명) ▲ 분야별 특화 일경험 지원(2.9 → 2.5만명)
- ☐ **(취업 연계 강화)** 일경험을 통해 구직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일경험과 취업 지원 연계 강화* 고용부·국조실·기재부
 - * ▲ (공공기관 인턴) 근무 성과태도가 우수한 인턴에게 우수수료증 부여, 정규직 채용시 우대
 - ▲ (중앙부처 인턴) 진로 상담·역량 개발 등 취업서비스 연계 제공
 - ▲ (해외일경험) 귀국후 취업상담제공(5,000명) 및 개발협력분야 취업 지원
- ☐ **(지역 일경험 확대)** 지역에 일경험 권역별 지원센터를 설치해(6개) 지역 선도기업과 지역 청년을 연계하여 일경험 제공, 지역체류비 신설* 고용부
 - * 타지역 소재 기업 일경험에 참여하는 지역 청년에게 체류비 월 20만원 지원
- ☐ **(자격증 취득 지원)** 국가기술자격 시험(산업인력공단, 493개) 응시료 50% 할인 지원(1인당 연 3회까지)으로 역량개발 지원 고용부

2 [취업]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

1. 청년 선호 일자리 취업 지원 기재부·고용부·외교부 등 협업

- ☐ **(해외 취업)** 청년 해외 취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연수 과정 확대* 및 연수 장려금(월 최대 20만원) 지원 고용부
 - * K-Move 스쿨 : '23년 2,100명 → '24년 3,100명
- 청년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국제기구 파견(JPO), KOICA 청년 이니셔티브*,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등 다양한 해외 교류 기회 제공** 외교부·교육부
 - * KOICA 해외봉사단,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등 '27년까지 누적 3만명 확대
 - ** 워킹홀리데이 주요국가 참여 연령 상향, 한미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('24~'27년, 2,023명), 한-EU 청년 교류(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 참여) 등

- **(서비스산업)** 웹기반 창작서비스, 웨딩·뷰티 서비스 등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마련*으로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**기재부 등**

* 취업·창업 활성화, 산업 성장기반 마련 등

2. 구인난·취업난 해소 지원 **고용부**

- **(청년 지원금)** 제조업 등 구인이 어려운 업종에 취업하는 청년 2.5만명에게 최대 200만원 지원금*을 지급하여 청년 취업 촉진

*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: 취업 3개월 후 100만원, 6개월 후 100만원을 청년에게 지원

- **(기업 장려금)** 중소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·고용 유지시, 최대 1,200만원* 지원

*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: 청년 1인당 월 60만원 × 12개월 지원(720만원) +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

- 지원대상 청년의 범위*를 확대('23년 9만명 → '24년 12.5만명), 더 많은 취약 청년들에게 노동시장 진입 기회 제공

* (현행) 6개월 이상 실업 대학(원) 졸업후 3개월 이후 →(개선) 4개월 이상 실업 대학(원) 졸업자 포함

3 [재직]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

1. 공정 채용 기반 마련 **고용부**

- **(온라인 채용 점검 강화)** 개인정보 침해 등 온라인 공공·민간 채용 포털의 위법 공고에 대한 모니터링 신설 및 현장 지도·점검 연계

- **(공정채용법 입법)** 부정채용·고용세습 등에 대한 제재 신설, 부정 채용자의 채용취소 근거 마련 등 불공정한 채용 관행 개선

2. 일·생활 균형 문화 조성 고용부

- **(유연한 근무문화 조성)** 유연근무 도입 희망 기업 컨설팅(400개소), 인프라 투자비 지원*, 유연근무 장려금 지급** 등 지원

* 유연근무를 위한 근태관리·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~80% 지원(2천만원 한도)

** ▲유연근무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, 1년간 지원(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 10만원 추가) ▲육아기 시차출퇴근 활용근로자 1인당 월 최대 20만원, 1년간 지원

- **(직장 적응 지원)** 청년의 원활한 직장 적응을 위해, CEO·관리자 대상 청년 친화 조직문화 교육·컨설팅 및 입직 초기 청년 대상 적응 프로그램 신설

2 체계적인 자산형성

◆ 청년의 자산 형성 욕구 확대, 이와 함께 대출경험·규모도 증가

* 청년취업자 대출여부 및 금액 : ('18년) 48%, 3765.7만원 → ('22년) 52.8%, 5618.1만원
청년취업자의 미래를 위한 투자 및 대비 여부 : ('18년) 65% → ('22년) 73.4% (한국고용정보원 '23년)

⇒ 청년들의 안정적인 미래 설계를 위한 자산기반 형성·도약 지원 강화

1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

1.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금융위·기재부 협업

- **(가입요건 조정)** 일하는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, 가구소득 요건을 중위 180% → 250% 이하로 완화 금융위·기재부

- **(중도해지요건 개선)** 청년 생애주기에 맞춰 요건 개선 금융위·기재부

○ 3년 이상 유지시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적용+ 정부기여금 일부 지원*

* (예) 3년 이상 계좌 유지후 중도해지시 정부기여금의 60% 수준 지원

< '24년 청년도약계좌 제도개선사항 >

- ▶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, 전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
- ▶ 일시적으로 육아에 전념중인 청년 가구 지원을 위해,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(수당)이 있는 청년도 가입 허용
- ▶ 혼인·출산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,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 모두 지원('24년 상)

2. 군 장병 자산형성 지원 강화

국토부·국방부 협업

- (군 장병 가입 지원) 군 장병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허용* 등 자산형성 상품 가입 확대 국토부·국방부

* 국방부가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를 통해 군 복무 증명시 가입 허용

- (연계 강화) 장병내일준비적금 만기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 가능, 자산형성 연계 국토부·국방부

2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

1. 원스톱 청년 금융지원 금융위

-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부터 재무 상담·관리까지 실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
-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5개소(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) 및 온라인 소통창구 신설·운영

< 원스톱 금융지원 절차 >

- ① (금융상황 평가) 상담 이용 청년의 금융상황 평가로 필요서비스 파악
- ② (금융교육) 필요한 분야의 금융교육(카드사용, 재테크, 부동산 계약 등) 중점 제공
- ③ (신용·부채상담) 신용·부채 관련 상담 제공, 모의 금융이용 등으로 부채 선제 예방
- ④ (자산형성 지원) 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상품 연계 및 안내 강화
- ⑤ (자산관리 서비스) 자산관리계획 수립 등 지원으로 중장기 자립역량 제고
- ⑥ (자립기반 연계) 고용·복지 서비스 연결 안내 등 자립기반 연계 체계 구축

2. 경제·금융교육 확대

금융위·기재부 협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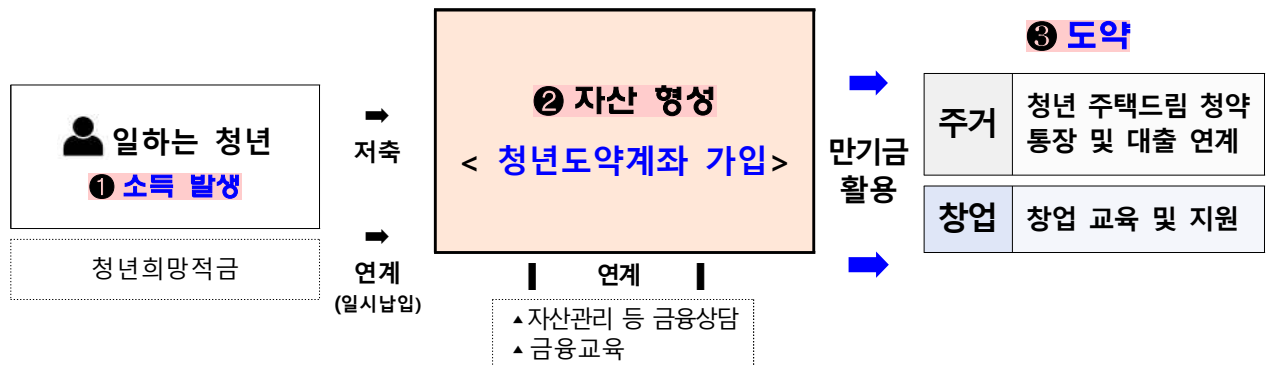
- 사회초년생이 경제생활, 자산관리 등을 할 때 꼭 필요한 경제·금융 지식(부동산·금융상품 정보 등)을 온라인을 통해 제공 기재부·금융위
-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, 금융교육 통합 플랫폼 개편을 통해 공공·민간의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청년에게 맞춤형으로 제공

③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

- 청년도약계좌를 중심으로 여러 청년지원 정책을 연계하여 가입자 및 만기해지자에게 창업·주택 구입 등 혜택 제공

→ 자산형성을 넘어 실질적인 '도약'의 발판으로 청년도약계좌를 활용

< 청년도약 패키지 >



1. 자산형성 교육 연계 금융위·교육부 협업

-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에게 자산관리 및 채무상담 등을 제공하여, 미래 자산형성 계획 등 수립 지원 금융위
- 한국장학재단이 실시하는 금융교육에 청년도약계좌 등 정책 금융상품을 통한 중장기 자산형성 교육 신규 개설, 활용 지원 교육부

2. 주택·창업 등 지원 연계 국토부·중기부 협업

- (주택 마련 연계) 청년도약계좌 만기수령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 허용 국토부
 - 이후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 자금 지원
- (창업 연계) 창업중심대학과 연계하여 희망자에게 창업 교육을 제공, 우수자는 예비창업자 사업화자금 지원 사업으로 연계 중기부
- (신용 관리) 청년도약계좌 성실납입자에 대해 신용점수 가점이 부여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 금융위

3

청년생활 걱정해소

- ◆ 청년의 안정적 주거·생활 토대를 마련하고, 문화·여가·건강 등 지원 강화
⇒ 청년의 주거·생활비 부담을 줄이고, 미래 준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

① 주거 부담 완화

1. 청년 공공분양·임대

국토부

- (**공공분양**) 청년 특공 등으로 청년층에게 뉴:홈 6.1만호 공급('24년)
 -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공급, 저리의 40년 전용 모기지(분양가의 최대 80%) 등을 통해 내집마련 부담 완화
- (**공공임대**) 수도권, 교통 편리 등 우수입지를 중심으로 청년층 공공임대 5.1만호('24년) 공급으로 청년 주거비 부담 경감
- (**청년특화주택**) 역세권, 도심 등 선호입지에 청년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결합한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(1천호 공모선정 계획) 공급

2. 청년 주택 대출 지원

국토부

- (**청년 주택드림 대출**)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.2%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 80%까지 구입자금 지원
- (**신생아 특례 대출**) 출산 2년내 무주택가구에 1.6~3.3% 금리로 주택 자금 대출 지원, 추가 출산시 추가 우대(신생아 1명당 0.2%p)

3. 기숙사비 부담 완화

교육부

- (**기숙사비 결제 다양화**) 기숙사비 카드 결제 확대로 기숙사비 일시 현금 납부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
- (**연합기숙사**) 수도권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건립하고 규제 완화*를 통해 기숙사 공급 확대
 - * 도시계획조례 상의 용적률 기준 완화 등을 위한 지자체 협의 추진

② 생활비 부담 완화

1. 대학생 학비 부담 경감

교육부

- **(국가장학금 확대)** 기초·차상위 가구 등 등록금 전액 지원, 구간별 지원금액 확대* 등 국가장학금 지원 지속 확대

* 1~3구간 : 50만원, 4~6구간 : 30만원 단가 인상('24)

- **(근로장학금 확대)** 저소득 대학생들이 일과 학업을 병행하며 장학금을 수혜받을 수 있는 근로장학금 지원 인원 및 금액 확대*

* 근로장학생 지원인원 : ('23년) 12만명 → ('24년) 14만명

근로장학생 지원단가 : ('23년) 교내 9,620원, 교외 11,150원 → ('24년) 9,860원, 12,220원

2. 여가·교통·문화비 지원

국토부·문체부·행안부 협업

- **(여가비)** 관광·통학 등 타지역에 체류하는 청년들에 대해 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주민에 준하는 혜택 제공 추진 **행안부**

- 생활인구*에 기반하여 청년들에게 지역공공·문화시설, 숙박시설 할인 등 인센티브 부여 검토

* 기존 정주민구 외에 체류하는 사람(월1회, 하루 3시간 이상)도 인구에 포함

- **(교통비)** 중앙정부·지자체 협업*으로 전철·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청년에게 지출 금액 최대 30% 환급하는 'K-패스' 도입 **국토부 등**

* 경기(The 경기패스), 인천(인천 I-패스) 등과 같이 K-패스를 기반으로 청년 범위 및 지원횟수 확대 등 지역 주민 혜택을 강화하는 지역 맞춤형 K-패스 사업 지속 확대

지원 사업	지원 기준	이용 수단	지원 대상	지원 상한	이용 지역
K-패스(전국)	월 15회↑ 대중교통 정기 이용자	전철 시내마을 버스 등 (GTX 광역버스)	청년 30% 일반 20% 저소득 53%	월 최대 60회	전국 (이용자 주소지 지자체 참여시)
The 경기패스				61회~무제한 추가 지원	
인천 I-패스					

- **(문화비)**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(19세) 16만명 대상으로 순수예술 분야에 사용 가능한 청년문화예술패스(최대 15만원) 지원 **문체부**

③ 청년 건강·안전 지원

1. 마음건강 관리 지원

복지부·병무청 협업

- **(초기 진단 지원)** 청년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는 모바일 챗봇 마음건강 자가검진 서비스 제공* 및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진 확대** **복지부**

*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우울증 등 자가검진 → 결과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·병원 방문 안내

** 검진주기 단축(10년 → 2년), 검사항목 확대(우울증 → 조현병, 조울증 등 추가) ('25년)

- **(첫 치료 지원)** 검진 결과,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경우(중간 이상 우울증 의심 등) 첫 진료비 지원 검토 **복지부**

- 심리적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는 **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**를 제공하고, 청년 대상 본인부담금도 경감 검토*

*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통해 전연령 소득구간별 차등지원(본인부담금 0~40%) →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 본인부담금 면제 등 청년 부담 완화 검토

- **(병역검사 연계)** 병역판정검사시 청년 정신건강을 정밀검사하고,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, 상담 치료 제공 **병무청**

2. 신체건강 관리 지원

문체부·복지부·농식품부 협업

- **(청년 건강관리)** 취약청년 신체건강 바우처* 이용 확대('25년) 및 청년들의 건강 관리를 위한 비용부담 완화 방안 검토 **복지부 등**

* (현행) 14개 시도, 과제중저체중 청년 → (개선) 전국, 취약청년(가족돌봄자립준비고립은둔 청년 등)

- **(천원의 아침밥 확대)**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(450만명분)에게 아침 식사 1천원* 추가 제공 확대 **농식품부**

* ▲ 정부지원단가 : 1천원 → 2천원 ▲ 식수인원 : 233만명분 → 450만명분

3. 청년 해외 안전 강화

외교부

- 청년의 여행·유학 등 해외 체류중 절도, 사고 등 위급사항 발생시 영사콜센터의 '핫라인' 역할 수행 등 원스톱 안전여행시스템* 제공

* ①안전정보 제공(홈페이지앱) → ②해외도착시 국가별 맞춤 안전로밍 문자 → ③긴급상황 발생시 영사콜센터 신고 → ④영사·영사협력원 영사조력 → ⑤안전 귀국 등 단계별 원스톱 영사조력

④ 청년 결혼·출산 부담 경감

1. 출산·양육지원 확대

여가부·기재부 등 협업

- **(기업 출산장려금)** 기업의 출산 장려금 지급시, 기업·근로자의 추가 세 부담이 없도록 세제지원 방안 마련 **기재부**
- **(한부모 육아 청년 지원)**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자에게 환수하는 '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' 단계적 도입* **여가부**

* 현행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양육비 선지급제로 전환하여, 양육비 선지급 및 회수율 제고를 위한 강제 징수체계 구축, 고의적 채무 불이행자 이행력 강화 등 추진

2. 결혼 메리트 확대

국조실·전부처 등 협업

- **(결혼 메리트 확대)** 맞벌이 부부가 청약 및 각종 청년정책 수혜에 불이익이 없도록, 결혼시 발생하는 불이익을 개선하고 이익 확대
- 청약제도 중심으로 제도를 기개선, 금년부터 시행 **국토부**

현 행	개 선('24.3월 시행)
공공분양 특별공급시 맞벌이 소득기준 월 소득 140%	맞벌이 소득기준 현실화 월소득 200%
결혼前 배우자 주택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존재시 신혼생초 특공 신청 불가	결혼前 배우자의 주택소유 및 당첨 이력 배제
당첨 발표일이 같은 공공·민간 청약에 부부가 중복 당첨시 모두 부적격 처리	부부 모두 당첨시, 선접수는 유효처리 → 동일단지에 부부 개별 청약신청 가능
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시, 신청자 개인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계산	배우자 통장 가입기간의 50%를 합산하여 점수 부여

- 청년정책 중 맞벌이 부부에게 불리한 가구소득 기준은 미반영하거나 완화토록 지속 개선 추진 **국조실·전부처 등**

4

청년정책 기반 확대

◆ 정책을 청년이 쉽게 알고, 정책과정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채널 확대 등 청년친화 정책추진기반 강화

⇒ 많은 청년에게 더 많은 혜택과 참여를 제공

1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

1. 청년 참여채널 지속 확대

국조실·전부처 협업

- ☐ (위원회) 중앙행정기관 청년 참여 위원회를 대폭 확대(57개 → 221개) 하고, 지자체까지 확대
- ☐ (청년보좌역·2030자문단) 청년보좌역·2030자문단 제안내용이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포상 등 인센티브 강화·우수사례 공유
- ☐ (행정인턴) 일경험은 물론 청년이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실질적인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책 과제 부여* 등 운영 내실화

* ▲ 프로젝트팀 : 부처별 팀단위로 정책 프로젝트 과제 추진

▲ RED팀 : 청년직원·인턴으로 구성하여 청년정책 직·간접 체험, 이슈발굴, 현장 방문, 대안 토의 등을 거쳐 정책화 추진

2. 청년이 만드는 청년정책

국조실·전부처 등 협업

- ☐ (청년친화도시)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 참여를 촉진하는 청년친화도시 신규 지정(매년 3~5개, '24년~) **국조실**
- ☐ (청년 고관심 정책) 청년들의 관심 높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하여 정책 수립·추진 **국조실·전부처**

②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

1. 오프라인 : 청년지원센터

국조실

- ☐ 중앙 청년지원센터 및 17개 시·도별 거점 청년지원센터를 지정·운영하여 체계적 청년정책 수집·제공
- ☐ 지역별로 편차 없는 통합적인 청년정책 제공을 통해 각 지역 청년들이 접하는 청년정책 서비스의 질 제고

2. 온라인 : 통합플랫폼

국조실

- ☐ 부처별·지역별로 산재된 청년정책 정보를 실시간·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체계 마련
- ☐ 청년 개인 관심 분야·여건(소득, 지역) 등에 따라 맞춤형 청년정책 추천, 지원자격 진단, 상담,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

V. 기대 효과

- **(20대 초반 청년)** 적성 탐색부터 경력 쌓기까지 정부의 선제적인 지원으로 막대한 취업 준비 과정 개선 + 학자금 부담 완화

- ① **(취업 준비)**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50개교 15만명 지원으로 미리 적성 탐색 및 진로 설계 수립 가능 → 첫 직장 입직시기 단축
- ② **(일경험)** 양질의 일경험 기회 확대로 청년이 경력을 쌓아 이를 토대로 역량 개발 가능 + 일경험 이후 사후 지원 강화로 취직까지 연결
- ③ **(국가장학금)** 국가장학금 지속 확대, 학비 걱정 없이 학업 매진

- **(20대 후반 청년)** 빈 일자리 등에 취업, 유연한 근무 환경에서 일·생활 균형 노력

- ① **(취업)**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(최대 200만원),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(최대 1200만원) 등 구인난·취업난 분야의 해소 지원
- ② **(일·생활 균형)** 유연근무 도입 기업 컨설팅(400개소), 인프라 설치비(최대 2천만원), 장려금(10~40만원) 지급 등으로 유연한 근무 형태 확산

- **(30대 초반 청년)** 청년도약계좌 및 자산관리 지원으로 자산 형성과 주거 기반 마련, 생활비 절감, 참여제도를 통해 국정운영에 참여

- ① **(자산형성)** 더 쉽게, 더 많은 청년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→ 씨드머니 형성, 자산관리 교육을 통해 체계적인 자산관리 계획 수립 가능
- ② **(주거)** 청년층 공공분양 6.1만호, 공공임대 5.1만호 공급, 신생아특례대출(금리 1.6~3.3%) 32조 규모 공급, 청년 드림주택대출(금리 2% 대출, '24.12~)
- ③ **(생활비)** K-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30% 환급, 생활인구 기반 지역체류여가비 등 할인
- ④ **(참여채널·대상 확대)** 221개 청년참여위원회, 총 24개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보좌역·2030자문단을 통한 국정운영 참여

추진과제	조치사항	일정	소관부처
1 빈틈없는 취업 지원			
① 취업 준비 선제 지원			
▶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확대	운영대학 약정체결	'24.3월	고용부
▶ 재학생 일경험 확대	학점 확대 관련 대학 협조 요청 방학중 일경험 프로그램 운영	'24.7월 ~'25.2월	교육부·고용부
▶ 병역진로설계 지원센터 및 지원대상 확대	울산, 창원, 의정부 개소	'24.7월	병무청
▶ 공공·민간 일경험 확대	일경험 프로그램 개시	'24.3월	고용부·국조실 등
▶ 권역별 일경험 지원센터 확충	권역별 6개소 약정체결	'24.3월	고용부
▶ 지역프로그램 발굴 확대 및 지역체류비 신설	지역 일경험 기업 발굴 등	'24.3월	고용부
▶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	사업개시, 신설사업 홍보	'24.1월	고용부
▶ 일경험 사후 취업 지원 연계 강화	운영기관 선정 및 운영	'24.1월	고용부·국조실 등
②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			
▶ 해외 취업 맞춤형 어학·직무 연수(K-Move 스쿨)	연수기관·과정 선정·운영	'24.1월	고용부
▶ 청년 해외 교류 확대	KOICA 해외봉사단 규모 확대 워킹홀리데이(개국) 연명 상향 등	'24.12월	외교부
▶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 마련	대책 발표	'24.3월	기재부 등
▶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지급	홍보 및 집행상황 모니터링	'24.1월	고용부
▶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지급	홍보 및 집행상황 모니터링	'24.1월	고용부
③ 청년친화 기업문화 조성			
▶ 온라인 구인공고 모니터링·현장지도 강화	채용절차법 위반 점검	'24.하	고용부
▶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	신속 입법 적극 지원	'24년~	고용부
▶ 유연근무 도입 기업 컨설팅	컨설팅 지원	'24.3월	고용부
▶ 유연근무 인프라 설치비 지원	인프라 설치비 지원	'24.1월	고용부
▶ 유연근무 기업 장려금 지급	유연근무 장려금 지원	'24.1월	고용부
▶ 청년친화 조직문화 교육신입직원 적응 프로그램 도입	프로그램 개시	'24.3월	고용부
2 체계적인 자산형성			
①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			
▶ 청년도약계좌 가입·해지요건 개선	가구소득 요건 완화 등	'24.3~4월	금융위
▶ 청년 주택드림 통장·장병내일준비적금 연계	만기수령액 일시납 허용	'24.2월	국토부·국방부
② 체계적 자산관리 지원			
▶ 청년 원스톱 금융 지원 도입	청년 금융상담 인력 배치	'24.하	금융위
▶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한 경제·금융교육 제공	경제교육 플랫폼 출범 금융교육 플랫폼 고도화	'24.6월	기재부 등
③ 청년정책과 연계 강화			
▶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 금융교육·상담 신설	상담 프로그램 정식화	'24.하	금융위
▶ 한국장학재단 금융교육 강화	교육 강좌 신설	'24.7월	교육부
▶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·드림대출 연계	세부 시행방안 마련	'24.12월	국토부
▶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대상 창업 교육 연계	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	'24.6월	중기부
▶ 청년도약계좌 장기가입자 신용등급 상향	신용정보법 규정 개선	'24.상	금융위

추진과제	조치사항	일정	소관부처
③ 청년생활 걱정해소			
① 주거 부담 완화			
▶ 청년층 공공분양 임대공급	공공주택 공급 관리(상시)	~'24.12월	국토부
▶ 청년특화 공공임대주택 공급	공모사업 실시	'24.5월	국토부
▶ 청년 주택드림 대출 지원	세부 시행방안 마련	'24.12월	국토부
▶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	대출 개시	'24.1월	국토부
▶ 연합기숙사 건립	4개 연합기숙사 착공	~'24.10월	교육부
▶ 기숙사비 결제 다양화	대교협 여신금융협회 등 협의	'24.3월	교육부·금융위
② 생활비 부담 완화			
▶ 국가장학금·근로장학생 확대	예산안 반영	'24.8월	교육부
▶ K-패스를 통한 대중교통비 환급	K-패스 사업 시행	'24.5월	국토부
▶ 청년문화예술패스 신설	청년문화예술패스 발급개시	'24.4월	문화부
▶ 생활인구 기반 청년혜택 검토	혜택범위 등 지자체 협의	'24.하	행안부
③ 청년 건강관리 지원			
▶ 취약청년 신체건강증진서비스 확대	계획수립 및 재원 확보	'25.3월	복지부
▶ 천원의 아침밥 지원 확대	지원단가 및 인원 확대	'24.3월	농식품부
▶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검진 제공	시스템구축 및 검진 제공 개시	'24.9월	복지부
▶ 청년 대상 건강검진 확대	타당성 분석 고사개정 및 시행	'25.1월	복지부
▶ 마음건강 첫 진료비 지원	재원 확보 및 시행	'25.1월	복지부
▶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지원	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행	'24.7월	복지부
▶ 병역판정검사 계기 정신검사 정밀검사·치료연계 확대	정밀검사 및 치료연계 확대	'24.2월	병무청
▶ 청년 해외안전 지원 강화	해외안전 담당 영사 확대 영사협력원 증원	'25년 '24.12월	외교부
④ 청년 결혼·출산 부담 경감			
▶ 기업 출산장려금 세제지원	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	'24.9월	기재부
▶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단계적 도입	관계부처 협약법 개정안 마련	'24.4월	여가부
▶ 결혼 메리트 확대	지속 개선	~'24.12월	국조실·전부처 등
④ 청년정책 기반 확대			
① 국정운영에 청년 참여 확대			
▶ 청년참여 위원회 확대	시도 청년참여위원회 확대	'24.6월	국조실
▶ 청년보좌역2030 자문단 인센티브 강화·우수사례 공유	우수사례 공유 및 포상	'24.하	국조실
▶ 행정인턴 정책 과제 부여 등 내실화	과제 부여 등	'24.상	국조실
▶ 청년친화도시 신규지정	매뉴얼 마련 및 신규 지정	'24.하	국조실
② 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			
▶ 중앙-거점(17개) 청년지원센터 지정·운영	중앙지역별 거점센터 지정 공고	'24.4월	국조실
▶ 온라인 청년정책 통합 플랫폼 구축	1차 구축사업 진행	'24.3월	국조실